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vol.639, February 2020

02



국회보

[표지이야기]

시린 겨울바람을 견뎌낸 동백나무는
마침내 나뭇가지 언저리마다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2020년 국민들이 걷는 길에도
찬란한 희망의 꽃이 환하게 피어나길,
더욱더 단단하고 올곧은 국회가 되어
국민의 삶에 평안과 안녕을 전하겠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윤미 작가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39, February 2020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0년 2월 3일

발행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홍보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임익상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고상근 위원(법제실장)

이강혁 간사(홍보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 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서기정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라트비아, 의회 간 교류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국회 판인, 우리 고유의 훈민정음체로 바꾼다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오픈

특집 2020 국민대통합 방안

14 정치의 진보·보수 갈등 그 이유와 해법_ 김형준

16 자산 불평등과 사회 갈등_ 이우진

18 세대 갈등 실태와 세대 통합 방향_ 원영희

20 젠더 갈등,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전진_ 이나영

22 위원장 초대석_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편에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할 것”

24 길에서 길을 찾다_ 안상수 의원
국제적 공향·항만·관광도시 인천

28 칭찬합시다_ 이태규 의원
“한국정치, ‘실용적 중도’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

30 의원의 좌우명_ 김성태 의원
50년 넘는 세월 동안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글귀



- 32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최운열 의원
정책 대안 제시하는 ‘미스터(Mr.) 브레이크’
- 3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스마트 혁신금융,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40 새 법률 소개
국회,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의결
- 50 법률 시대를 읽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_ 조용복
- 52 법 시행 그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54 주재관 리포트
러시아의 고유한 의회 규칙_ 유승우
- 56 만화
도로교통법(개정)
- 58 위원회는 지금
국회,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열어
- 61 국회스케치

- 62 국회 뉴스
- 70 국회 사람들
내가 배를 만들지 않고 국회에서 일하는 이유_ 안병갑
- 72 경제이야기
주택문제는 왜 특효약이 없나_ 이진우
- 74 청년에게 듣는다
농촌청년정책의 현주소와 과제_ 유지황
- 76 과학을 읽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_ 고호관
- 78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자주와 애민, 창의와 열정... 첨단 디지털시대 자격루_ 이광표
- 82 역사 속 길을 찾아
고구려의 성을 걸으며 굽이쳐 흐르는 유장한 물줄기,
남한강을 굽어보다_ 장태동
- 86 생활 속 우리말글
소리대로 적기와 어법대로 적기_ 김형주
- 87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88 편집 후기
정치의 품격_ 이춘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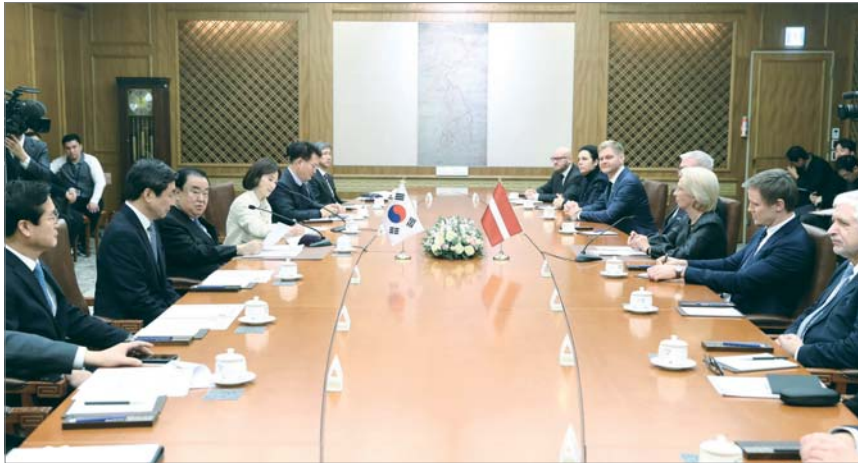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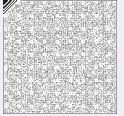
문화상 국회의장, “한국과 라트비아, 의회 간 교류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문화상 국회의장과 이나라 무르니에쎄 라트비아 의장방문단이 1월 9일 국회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나라 무르니에쎄 라트비아 의장 방문단과 문화상 국회의장, 이종걸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송영길 의원,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문화상 국회의장은 1월 9일 국회접견실에서 이나라 무르니에쎄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만나 “2019년에는 주라트비아 한국대사관 승격, 한국과 라트

비아 직항 전세기 취항 등 양국관계에 중요한 일이 많았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양국 국가 간 교류, 의회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나라 무르니에쎄 라트비아 국회의장의 면담 장면

다”고 말했다.

이어 “라트비아와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많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싸여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것을 스스로 극복해냈다는 점이 비슷하다”면서 “이런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라트비아의 주요 경제협력 국가”

이에 무르니에쎄 라트비아 의장은 “한국은 라트비아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국가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규모가 크게 늘었다. 앞으로 라트비아의 낙농업 제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르니에쎄 의장을 국회 사랑제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가 더욱 확대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방에는 이종걸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고, 라트비아측에서는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 리하르드스 콜스 외교위원장, 가티스 에글리티스 의원, 야니스 부찬스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국회 관인, 우리 고유의 훈민정음체로 바꾼다

(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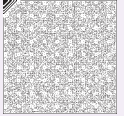


문희상 국회의장이 1월 21일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공식 관인이 우리 고유의 훈민정음체(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로 바뀐다. 국회는 1963년 이후 50여 년간 사용해온 한글 전서체(篆書體)

관인을 대신해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인을 제작할 계획이다.

국회 관인은 국회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으로, 국



<현재의 국회 관인>

회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국회 관인은 1963년 제작된 것이다. 그동안 관인에 사용된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새로운 관인 제작 시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2011년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실제 교체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번 관인 교체로 국민이 관인의 내용을 인지하기 쉽게 하기로 했다. 먼저 외부 전문가로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한글의 우수성과 국회의 위상을 담을 수 있는 관인 제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인제작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1일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관인의 교체는 지난 50여 년간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부터 관인을 바르게 제작·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관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인제작 자문위원회에는 제5대 국새 제작위원이었던 황보근 한국전각협회 부회장과 오두옥 한국인장업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는 자문위원회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새로운 관인제작 방안을 마련한 뒤, 공모를 통해 우수한 관인 모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위원회,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 발표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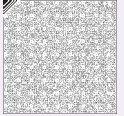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김세연 위원장, 박종희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국회는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출입기자, 보건·

복지 전문매체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주요 입법 성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건을 제시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환자안전법 개정안’),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체계 강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성과로 꼽았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동약자 편의성 제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살·고독사 예방(‘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납부능력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책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에서는 첨단재생 의료·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시체·잔여검체 활용 연구 기회 확대(‘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극복 기반 마련(‘암관리법 개정안’) 등을 성과로 꼽았다.

김세연 위원장 “약자 보호와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의 초석 다져”

김세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주요 입법 성과 외에도, 김세연 위원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사태와 관련,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문화상 국회의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1월 30일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한 문화상 국회의장이 장병들과 오찬을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강조할수록 국방태세 완벽히 갖춰야”

문화상 국회의장은 1월 30일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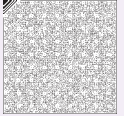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날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 쓰느라 안보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국방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0년도 국방예산이 자그마치 50조 1천 500여 원이 편성돼 사상 첫 50조 원 시대가 열렸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는 6조 2천156억 원이 편성됐다”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방부의 각오가 실감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위문금을 전달한 문화상 국회의장은 항공기 격납고를 방문해 국산 전투기 FA-50에 직접 탑승한 뒤 비상

대기실을 찾아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이후 문화상 국회의장은 영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뒤에는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견뎌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부대 측에 위문품으로 건조기 10대를 전달했다. 🍲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오픈

30일간 1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 성립



‘국민동의청원’ 메인 화면 이미지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온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1월 10일 오전 9시 오픈했다.

이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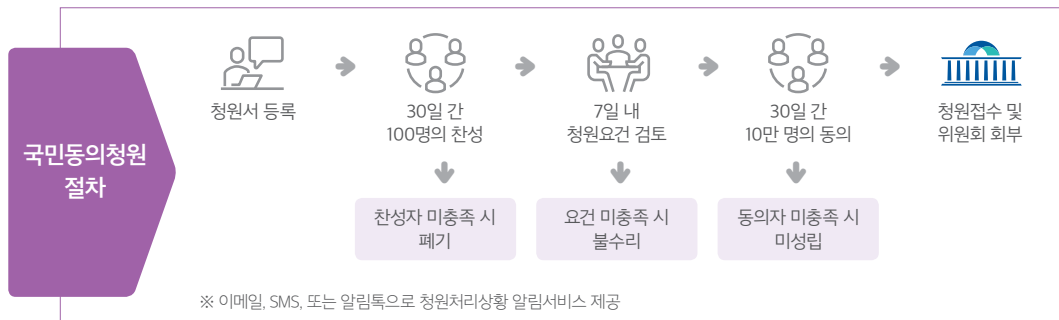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해 청원을 하려면, ‘국

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맞춰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돼 동의를 진행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어떻게 다른가

2017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과 유사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이 성립(국민 20만 명 이상 동의)되더라도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동의청원’의 명칭 또한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려 공모를 통해 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전자청원시스템의 이름에 대한 국민 공모를 실시, 최우수작으로 뽑힌 ‘국민동의청원’을 최종 명칭으로 확정된 바 있다.

1월 14일 공개된 1호 ‘국민동의청원’인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를 시작으로 1월 15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1월 21일 물리적 성범죄보다 극심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이 청원들은 공개된 후 30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한편, 기존의 국회의원 소개 청원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청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Special Issue

특집

2020 국민대통합 방안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자산 격차에 따른 사회 갈등, 세대 및 젠더 갈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치의 진보·보수 갈등 그 이유와 해법

김형준 교수

자산 불평등과 사회 갈등

이우진 교수

세대 갈등 실태와 세대 통합 방향

원영희 교수

젠더 갈등,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전진

이나영 교수

정치의 진보·보수 갈등 그 이유와 해법

우리 사회는 ‘5무(無) 정치’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 정치 공학만 있고 정치 철학은 없다. 진영의 논리에 빠진 극한 대립과 투쟁만 있고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협치는 없다. 비판(선동)만 있고 대안(정책)은 없다. 당리당략만 있고 국민은 없다. 한국리서치가 작년 11월에 실시한 갈등 인식 조사 결과,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많았고, ‘진보와 보수 갈등’(59%)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왜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번의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고 이념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가?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수와 진보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첫째,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 때문이다. 대통령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교과서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도 결코 견제받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예산 편성권, 감사원, 입법권, 인사 인준권 등이 모두 의회에 귀속돼 있다. 더구나, 사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분리돼 있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권, 감사원이 모두 행정부에 속해 있다. 장관 임



김형준 교수
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명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집권당을 철저히 수직 통치하고,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내각제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권력구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합과 공존의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극단적 대결 정치를 주도하면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진보는 선이고 개혁 세력인 반면, 보수는 악이고 적폐의 대상이라는 인식 속에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인사권 남용’은 결국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둘째,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는 ‘행정부 견제’와 같은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보다는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야당 의원은 의정활동의 목표를 정부를 반대하는 데 맞추고 있다. 작년 한국갤럽 조사(10월 22~24일)에 따르면, 제20대국회(2016년~2020년)의 역할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고 8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4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셋째, 1인 지배의 허약한 원외 정당체제다. 원외 정당체제는 원내 중심 체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의원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 대표보다는 당원들이 선출한 원외 대표가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다. 이런 정당체제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기보다 당론에 따라 움직이도록 한다. 국회에서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 당론과 당론이 부딪치면서 결국 진보와 보수 간의 극단적 갈

등이 증폭된다.

대통령의 권력 분산 위해 개헌에 착수해야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접고 공존과 통합의 정치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본질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실효화시켜야 한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합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막기 위한 규범으로 그들은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상호 존중이란 상대방의 가치와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제도적 자제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헌법적 권한을 무조건 100%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절제하려는 태도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규범들을 내재화해야 한다.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이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각 진영의 논리만을 대변한다면 결국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 호소가 효과적인 환경”이 되는 ‘탈진실(post-truth)’을 증폭시키게 된다.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와 논쟁적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대통령, 국회, 정당,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

자산 불평등과 사회 갈등

불평등은 크게 보아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보다는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기에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문제다.

개인이 저축한 부분에 의해 자산의 대부분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면 자산 불평등의 원인도 상당히 많은 부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이 상속이나 자본이득(시세차익)과 같은 것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자산의 형성 동학은 소득의 형성 동학에 의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속도로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30개월 만에 3억 원이 올라 현재 9억 원에 육박한다. 대기업 임원이 매년 6천만 원을 5년간 저축해야 간신히 모을 수 있는 돈을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시세차익으로 30개월 만에 벌었다. 강남의 한 아파트는 30개월 만에 15억 원이 올랐다.

반면 지방의 주택가격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지방의 집을 팔아 서울의 ‘뽕뽕한’ 한 채를 구매하려 혈안이 돼 있다.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같은 일부 핵심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가격상승폭은 현저하게 다르다.

지금 서울과 지방, 서울 자치구들 사이, 그리고 유주택자와 무주택



이우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자 사이에 자산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도 없고 생산활동도 담당하지 않는 고령층은 서울의 핵심지역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반면 자녀교육과 생산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청장년층은 먼 거리의 서울 외곽지역에서 전세를 살면서 힘겹게 출퇴근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의 청년들이 건설한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로또나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최근 불안정해진 부동산 가격은 사실 이전 정부가 실시한 규제 및 금융 완화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정책참모들의 안이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기 힘들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가격폭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으로 인한 공급부족이다. 정부는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확대했다. 이 정책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건을 장기간 묶어두어 버렸다. 정부는 임대사업등록자들에게 제공된 혜택을 하루 빨리 축소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신도시 건설만이 공급정책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의 부동산 정책 피해야

최근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나친 대출억제는 거래절벽만 초래한다.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없으니 가격은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데 이를 가격안정화라 부를 수는 없다. 오히려 규

제가 풀리면 가격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것이다. 무주택자에게까지 대출을 억제하면 전세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원리금 동시상환방식의 장기대출은 늘리고 전세나 신용대출과 같은 단기성 부채를 줄여야 가계부채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일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이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LTV 완화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전세가 활성화돼 있는 한 금융권 대출규제만으로 가격을 안정화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제도를 활용한 갭투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쉽게 고가아파트에 투기할 수 있다. 전세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전세금 대출과 전세금 보증은 서민용 소액을 제외하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갭투기가 불가능해진다. 부동산 구입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자기 소득에 걸맞은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

보유세 부담도 빨리 늘리기 바란다. 세율인상은 시간이 걸리니 공시가격을 빨리 현실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보유세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던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것은 불로소득인 시세차익을 ‘먹튀’하도록 하는 것이니 조심할 일이다.

부동산 문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격안정화를 이뤄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화에 협력해야 한다. 🏠

세대 갈등 실태와 세대 통합 방향

세대 갈등의 원인과 양상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정보화의 진전,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세대 차이가 현저히 증대돼왔다. 각 세대 간 물리적 접촉의 감소는 물론 이질적인 생애사(生涯史) 등으로 세대 간 공유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 및 문화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고방식 및 사회인식 차이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 저성장시대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노인층 확대에 의한 세대 간 조세부담과 공적 이전 지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경쟁 등 세대 간 형평성이 사회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4.4%가 우리 사회 세대 갈등의 심각성에 동의했는데, 10~40대가 50~60대에 비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2017년 노인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청장년층이 노인층보다 세대 간 대화에 어려움이 있으며(90.0% vs 40.4%), 세대 간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한 편으로 인식했다(80.4% vs 44.3%). 또한 노인층(45.5%)과 청장년층(55.4%) 모두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갈등의 심각성에 동의했다. 2017년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층의 72.1%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며, 66.6%가 향후 세대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인 반면,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원영희 교수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더욱이 세대 간 정치적 성향과 시각 차이가 상존하는 바, 정치적 영향력이 한정된 자원 배분문제와 직결되면서 세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추세다. 또한 세대 갈등은 사회 희소자원 및 기회 분배 등의 이슈와 중첩됨으로써 계층 갈등과 맞물려 증폭될 우려가 있다.

세대 통합을 위한 방안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세대가 함께 생존하는 기간 역시 연장됨에 따라 동시대에 공존하는 세대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多)세대 사회의 도래는 세대 갈등의 첨예화 및 복잡성을 예견할 수 있는바, 세대 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통합은 고령화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세대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편견을 완화 내지 해소하고 세대별 가치관 및 정체성의 차이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 이해 교육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 노화 및 노인의 특성, 노인 세대의 가치관, 살아온 역사적 경험 등을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노인 세대에게는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에 따른 현시대 다른 세대의 모습을 수용하도록 관련 교육 또한 시급하다. 특히, 세대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완화를 위해 노인 세대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및 디지털 역량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각 세대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완화를 위해 공익광고 및 동영상 제작, 대중매체의 활용, 노인·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그

리고 연령주의 철폐 및 세대 통합 캠페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공간이 제한적이며 세대 간 소통이나 만남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및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세대 간 긍정적 경험은 세대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다. 이와 관련,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상호작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대 통합 공간 조성 및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도와주고 공동 활동과 함께 학습기회를 갖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세대 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세대형평적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의 세대공유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사회의제에 대해 각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고, 중립적 세대합의 기구 신설을 통해 세대 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세대 통합은 세대 갈등 완화 및 세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며 공동체성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UN이 표방한 ‘Society for All Ages’와 같이, 고령화는 노인 인구만이 아닌 전 세대의 문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연령에 유익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 통합을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젠더 갈등,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전진

유리천장 지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지난 한 해 한국사회는 여전히 공고한 성차별의 현실과 새롭게 부상한 각종 성폭력 이슈로 얼룩졌다.

2019년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¹⁾는 100점 만점에 20점을 겨우 넘기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10개 성차별 항목 중, 성별임금 격차(34.6%), 여성 관리자 비율(12.5%), 여성 기업이사의 비율(2.3%) 등에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동시장 참여율 또한 성별 격차 20.3%포인트로 바닥권인 28 위였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1.5배 많고, 저임금(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여성 근로자 비율(35.3%, 남성은 14.3%)도 OECD 내 최악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총액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31.6%)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일어난 집단(약물) 성폭행 사건, 대형기획사가 연루된 해외 성매매 접대 의혹, 성폭행 장면을 공유한 남자 연예인들의 단독방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세계 최대 아



이나영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1)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매긴 점수로 교육, 경제활동 참여, 임금, 관리직 진출과 임원 승진, 의회 내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가 등에 대한 OECD 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결과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한다.



동 성학대 사이트를 개설하고, 6개월에서 10세 미만의 영유아들에 자행된 성폭력 촬영물을 경쟁적으로 올리며 엄청난 수익을 취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전국 각지의 성매매 업소들이 음란물로 성구매자를 유인하고, 성구매 인증샷을 올리면 대가를 지불하는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들 또한 여성단체들의 고발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불법 촬영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나름의 방책을 모색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짜 폐쇄회로 TV(CCTV), 창문 열림 경보기를 달고 여성 홈 안심서비스 등을 활용한다. 화장실, 사무실, 모텔 등에 ‘몰래카메라’가 숨어 있는지 살피기도 한다. ‘남초’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만연한 여성혐오 발언들을 피해, 여성만의 공간을 만들고 페미니즘을 공부하기도 한다. ‘성착취 카르텔’ 반대 집회 등을 조직하고 여성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결혼이나 임신, 육아를 통해 경력이 단절되기보다는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의 삶을 꿈꾸며 ‘4B 운동(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다. 외모중심주의 사회를 비판하며 남성의 일방적 성적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탈코르셋’ 운동에 적극적인 사람들도 많아졌다. 꾸밈노동에 드는 비용과 에너지를 각종 유리천장을 돌파할 자기역량 개발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국회의원과 지식인, 언론은 ‘남녀 갈등’이라고 진단하며, 예민한 일부 여성

들의 문제, 심지어 ‘과격함’ 페미니스트 탓으로 돌리고 ‘절망하는’ 남성 달래기에 집중하기도 한다. 일부 판사들은 수많은 여성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초범이다’,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한다’, ‘부양가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관용을 베풀고 있다. ‘성차별은 과거의 일’이고 요즘은 이기적인 여자들이 더 문제라며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완벽한 제도 마련보다 부당한 현실 직면이 우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완벽한 정의와 완벽히 공정한 제도 마련에 골몰하기보다,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가치 판단의 ‘복수성’을 인정하되,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하는 것이 정의를 촉진하는 길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인간의 삶은 제도뿐 아니라 실제 행위,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른 중요한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무엇을 폐기하고 무엇을 새로 받아들여야 할까. 뻔한 퇴행의 위험에 몸을 맡기기보다, 부정의를 제거할 가능성에 승부수를 던져야 하지 않을까. 공정한 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 약자가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간 보편타당하다고 믿어온 가치 때문에 생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아픈 현실을 직면하는 데서 출발한다.

2020년이 밝았다. 법과 제도적 변화의 초석이 될 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 사랑과 일상의 정의가 뿌리내리길 간절히 소망한다. 🍵

“국민의 편에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할 것”



김학용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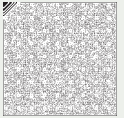
환경노동위원회는 먹는 물부터 공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문제와, 일자리 및 근로환경 등 노동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다. 현안 하나 하나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맞닿아 있어 더욱 주목을 받는 위원회라 할 수 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그간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및 남은 현안에 대해 들었다.

Q. 2년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A. 그간 환경노동위원회는 민감한 현안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파행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예민한 문제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였고,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감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에 더해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서로 존중하며 협조해주신 덕분에 격전지였던 환노위가 가장 분위기 좋고 열심히 일하는 민생 상임위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떤 대책들이 논의돼왔는지 궁금합니다.

A. 위원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국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돼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심사에 박차를 가해 상임위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했고, 국립환경과학원 통합대기질예보센터를 방문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노위를 열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썼습니다.

Q.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주52시간 근무제를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결정은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여러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 인력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못지않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Q. 그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룬 성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 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회의를 개최해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분야에서 기억에 남는 성과는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당리당락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2018년 12월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시켰고 결국 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정치 철학과 더불어 여야 위원님께 덕담을 겸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한민국 국회에 정쟁만 있고 정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울 뿐입니다. 첨예한 쟁점들이 여야 대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좀 더 포용적으로 야당을 대하고, 야당은 정당한 비판과 대화, 타협으로 협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2월 국회에서도 마무리 짓지 못한 환경과 노동관련 입법을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국제적 공항·항만·관광도시 인천

안상수 의원

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섬 전체가 거대한 문화유적지입니다. 선사 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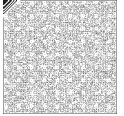
1월 20일 대한(大寒)을 앞두고 안상수 의원은 강화도 광성보 앞에 섰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한 광성보에는 호국의 역사가 깃들여 있다. 광성보는 강화 해협을 지켰던 중요한 요새로 강화 12진보 중 하나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로 천도한 후 돌과 흙을 섞어 해협을 따라 길게 쌓은 성터다. 1871년 신미양요 때는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이기도 했다.

인천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월미 바다열차’

안상수 의원은 이어 인천 중구 월미도로 향했다. 안 의원은 “인천 중구와 월미도는 우리 인천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곳”이라며 “100여 년 전, 개항 당시 서구열강의 활동기지이기도 했고 제물포항 개항 이후에는 경인공업지구의 관문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유서 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 왕실의 하계 휴양처이기도 했던 월미도는 지난 2001년 ‘월미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인천은 물론 수도권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인천의 명소다.

이곳 월미도에서 안상수 의원은 월미도를 순환하는 도심형 관광모노레일인 ‘월미 바다





강화 광성보 앞 안해루 입구에서

열차'에 올랐다. 월미 바다열차는 총 운행거리가 6.1km로,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데 42분 정도 소요된다. 최대 46명이 탑승 가능하다. 열차 안에서는 월미도와 인천 내항, 서해바다와 멀리 인천대교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시장을 지내던 2005년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용 모노레일을 도입했다”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개통식을 열고,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를 놓고 동북아를 원심형으로 그리면 인천이 그 중심에 있다”면서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인천은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화도의 역사문화유산,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구도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투자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닷길, 하늘길, 땅길이 시작되는 곳

안상수 의원은 월미공원 내에 있는 ‘월미 전망대’에 올랐다. 월미공원은 50여 년간 군부대 주둔으로 시민

출입이 제한됐으나 2001년부터 공원으로 개방됐다.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생태공원이다. 전망대 꼭대기에 서면 인천 시내를 물론, 서해바다와 인천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인천 중구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갖춘 지역이기도 하다. 동양 최대의 갑문시설을 갖춘 인천항은 우리나라 근대 산업화의 전진기지였다. 2001년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뱃길에 이어 하늘길도 열렸다. 또,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인천 중구는 그야말로 바닷길과 하늘길, 땅길이 시작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이어 안상수 의원이 향한 곳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차이나타운’이었다. 각종 중국 음식점이 들어서 있으며, 작은 중국풍 사원이나 짜장면 박물관, 개화기의 건물들이 남아 있다. 중국식 만두나 월병을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저녁노을이 질 무렵 안상수 의원은 꼭 들러야 할 곳이라며 인천 중구 자유공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만국공원,



인천 중구 ‘월미 바다열차’



인천내항 전경



17:30



인천 중구 자유공원

서공원 등으로 불렸으나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1957년 ‘자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일로 말하고 성과로 평가받을 것”

안상수 의원은 1996년 ‘경제계 젊은 피’로 발탁돼 신한국당 공천을 받은 이후 아홉 번 선거에 출마해 5승 4패를 기록했다. 1999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첫발을 디딘 그는 2002년부터 8년간 인천광역시장으로 일했다. 2008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회장을 방문해 인천 투자상담을 벌이며 교분을 쌓았다. 시장 시절, 북한 초청으로 두 차례 방북해 경제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5년 인천 서구강화군을 보궐선거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6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파동을 겪고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제20대국회에 입성했

다. 제20대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안상수 의원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90% 이상 참석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는 새벽까지 회의를 이끌었다. 2019년에는 인천 역대 최고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전국위원회 의장과 혁신비상대책위 준비위원장을 맡아 당 쇄신에 앞장섰다”고 했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면적으로만 인천의 70%를 차지합니다. 해양, 항공, 농림, 수산, 건설, 제조, 구도심재생 등 각종 지역 현안들이 중앙부처 전체를 움직여야 일이 되는 곳입니다. 경제전문가로, 종합행정가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뛰었습니다. 관료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싸워서, 독심 있게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로 말하고,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

인천 / 글. 박민선 사진. 임진완



금태섭 의원

“한국정치, ‘실용적 중도’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

지난달 국회보 ‘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은 다음 주자로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을 추천했다. 이 의원에 대해 금 의원은 “다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통찰력 있는 의원”이라며 “솔직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칭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고 제20대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칭찬을 받는 게 당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금태섭 의원께서 칭찬해주시니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금 의원은 현역 검사 시절부터 소외된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였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실천하는, 정말 보기 드문 합리적 개혁성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화답했다.

이태규 의원은 제20대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후반기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1990년 ‘꼬마민주당’ 공채 1기 당직자로 정치권에 첫발을 디딘 후 국회 보좌진, 한나라당 당 대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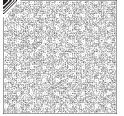


이태규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책특보, 제17대 대선 전략기획팀장 등을 거쳤다. 한국정치를 위해 일해온 이 의원은 “지금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지역주의와 결합해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실용적 중도’의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과 정책을 설득하는 것이라 봅니다. 상대방의 소신과 정책이 나의 주장과 충



돌할 때,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절충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뤄내기 위한 ‘실용적 중도’의 정치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및 소위 중심의 상임위 운영 필요

밥값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 이태규 의원은 제20대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힘써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소위원회 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 등 국회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일은 깊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국가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고민하고, 국가사업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부랴부랴 심의에 들어가 12월 2일 예산안 처리시한에 맞춰 처리해야 하니, 수박 겉핥기식 심의가 이뤄진다”며 “국회 역량을 1년의 반 이상 예산심의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위원회를 다원화하고 상시 운영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임위 제도는 행정부 정책을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기에는 구조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문제점을 소위에서 많이 논의하고 질의한다. 업무의 핵심에 있는 실국장급과 의원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최운열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태규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추천했다. 이 의원은 최 의원에 대해 “품격 있는 정치언어를 사용하시는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은 매일 싸우는 대결정치와 막말정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막말이 오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최 의원은 항상 정중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세요.”

특히, 이태규 의원은 최운열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의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칭찬했다.

“항상 온화하게 정책질의에 집중하시니 답변 또한 정책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것입니다.”

글: 서기정 사진: 유윤기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보는 2월호부터 의원들의 인생 좌우명을 소개하고, 이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의원의 좌우명' 코너를 신설합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글귀

뜻	이		있	는		곳	에	
길	이		있	다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김성태 의원이 소개한 자신의 좌우명이다.

“마산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교정에 들어서면 항상 저를 맞아주던 큰 바위에 새겨진 글귀였습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마주했던 이 글귀는 자연스레 제 좌우명으로 자리 잡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책 읽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던 김성태 의원은 “좌우명의 영향이었는지 어려서부터 늘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뜻을 세울 것인가, 어떤 길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 길을 찾으며 살다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다.

“제가 처음으로 마음먹은 것이 하늘을 나는 공군



파일럿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공군 파일럿이 되려면 건강한 신체
가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기계체조반에 들어가 활동하게 된다. 이후에도
신체단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져 30년이 넘게 해
동검도와 무술을 매일 아침 수련하고 있다.

공군 파일럿의 꿈과 공공에 대한 헌신

김성태 의원은 부친의 사업이 기울면서 인생에 어
려움을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 은사와 은
인들의 가르침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는 그때
받은 선의를 타인과 공공에 헌신하며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유학길에 올랐다.

“조지아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중 BDAC
(Baldwin Data Analysis Center)에서 일할 기회가 있
었습니다. 이때 제가 맡은 것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데
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만들고 학문에 적용하는 일이
었습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가 새로운 물결로 뒤덮이
고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판도가 변할 것이
라고 예측했지요. 이토록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나라도 한시라도 빨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귀국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
는 데 일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충남대 교수에 임용된 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정보기술(IT)과 정책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일들
을 시도하게 되고 이후 초고속망 구축, 전자정부, 스
마트사회 패러다임 정립, 빅데이터 계획 수립 등 우리
나라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관리위원회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한국대표와 세
계 전자정부평가위원장, 유엔거버넌스센터 자문위원
등을 맡아 한국의 정보화와 전자정부를 세계에 알리
는데도 앞장섰다.

“대한민국 정보화는 새로 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
다. 새 길을 개척하는 일은 낯선 바다에서 가장 먼저
암초를 헤치고 항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되겠
나?’라는 불신을 ‘이게 되는구나!’로 이끌어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마주해야 했으니깐요.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야 겨우 한 걸음을 뚫 수 있었던 나날의 연속이
었습니다. 그때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좌
우명은 내게 암초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4의 물결을 주도

제20대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성태 의원은 대
한민국에 제4의 물결을 주도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일
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제4의 물결,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익숙해져버
린 명칭이지만 이들이 지닌 변화와 혁신의 파급력은
우리의 예상 이상입니다. 민관이 상호개방, 공유, 협력
을 통해 창의를 극대화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을 해
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뚇 설 수 있도록 정치가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혁
신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이 세
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치혁신을 위
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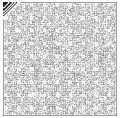
정책 대안 제시하는 ‘미스터(Mr.) 브레이크’

최운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은 여당 내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다 서강대 부총장을 거쳐 퇴직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코스닥 위원장,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증권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물경제를 경험했다. 비례대표로 제20대국회에 입성했다.

최운열 의원은 전남 영암군 신북면에서 나고 자랐다. 3남 3녀 가운데 막내였던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6·25전쟁으로 부친을 잃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17세 터울 큰 형님의 뒷바라지로 어렵게 광주제일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다. 집안 형편상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가 유학을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학생운동에 매진하다 대학 4학년 때 해군장교로 임관하려 했던 그에게 지금의 아내가 된 당시 여자친구가 “내년에 유학을 떠나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러다가 영영 헤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불안했던 그는 3년간의 장교 생활 끝에 1977년 8월 제대하고 며칠 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최 의원은 그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틈틈이 저축한 장교 월급으로 마련한 2천 달러가 최 의원의 전 재산이었다고 한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고, 잠깐 눈을 붙인 뒤에 학교로 향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는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내도 현재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시절 최 의원의 제자들은 그를 “어린 제자들의 사소한 고민도 들어주던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다.

“서강대는 ‘평생 지도교수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개별 교수당 5~7명의 학생을 배정해줍니다. 그 학생들이 ‘열사모(최운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만들었어요. 2015년 퇴임하는데 제자들이 퇴직기념 논문집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제가 그 비용으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자고 했어요.”

최 의원과 제자들이 반반씩 부담해 7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졸업생들과 기업인들의 후원을 받아 1억5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성공 위해 대안 제시하는 역할 하고 싶어

최운열 의원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권유로 정치에 첫발을 딛게 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된 그는 정책 현

안에 대해 가감 없이 쓴소리를 했다. 최 의원은 “당내에서 나의 역할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에게는 그래서 ‘미스터 브레이크’라는 별명도 붙었다.

“여당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요. 운전할 때, 빨리 앞으로 나가려면 액셀을 밟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액셀을 세게 밟을 수 있는 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공격도 받았지만 이해찬 당 대표는 그를 당 대표 경제특보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도 지냈고 초선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맡았다. 그가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저 같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기에 불출마 선언이 의미가 없다. 대학강단에 30여 년 섰던 저로서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구를 관리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힘지에 나가고 한다면, 당선 여부를 떠나 당인의 도리로서 거절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치권에도 갑자기, 운명처럼 왔습니다. 꼭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더라도 총선 공약이나 정책 개발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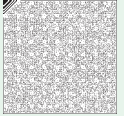
스마트 혁신금융,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0일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금융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금융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호 고려대 교수는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융혁신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본부장은 “은행은 현재 여러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은행도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으로 금융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은행이 기술기업으로 바뀌는 것이 금융혁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이나 AI를 활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 기술적 역량이 좀 더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혁신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추진하고, 혁신 핀테크 기업



●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3법’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학영·정춘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당시, 기업가치의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처럼 발표했으나, 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지금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해외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자발적 배당이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연금 측은 국민을 대리해 수행하는 단순 투자역할을 강조했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에 대해서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세미나

주주활동을 펼치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간섭을 하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씩 기업들과 가벼운 대화부터 의결권 표 대결까지 하나의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희 의원),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 김영춘 의원)은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난 1년간 정책을 되돌아보고 2020년 수소충전인프라·국제표준·안전·연구개발(R&D) 등 정부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본부장은 “2019년 수소전기차 보급의 목표는 5천476대였고, 실제 보급은 5천89대로 집계됐다. 수출은 1천 572대로, 연간 보급 실적은 세계 최대 규모”라며 “수소충전소는 현재 운영 중인 곳이 34개소, 건설예정 충전소가 약 50개소이며 지난해 말 기준 총 114개소의 건설예산이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은 정부의 융합클러스터 단지, 수소시범도시 등 유관사업과 연계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향후 개선과제로 꼽았다.

이흥기 우석대 교수는 수소경제 표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제표준은 기업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장치이고 정부차원에서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며 “그간 연구기관에서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해왔으나, 올해는 산업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세계적으로 51종의 표준이 제정됐거나 제정단계에



●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있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1종을 국제표준으로 처음 제정하고 현재 2종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는 수소 기술개발과 관련해 “3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해 이를 기반으로 수소 전 주기의 분야별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적 기반을 강조한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수소경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속성 담보와 산업계에 안정적인 정책방향 제시가 가능해졌다”면서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상세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새로운보수당)은 1월 15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계 주요 규제들의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의 문제점과 과도한 망 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신사 간 상호정산은 접속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한국은 데이터가 지나간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인터넷 기본 원리를 깨고 통신사의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유치 동기를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킬러 콘텐츠를 유치하면 상대방 망에 대한 누적 통행료가 늘어 돈을 더 내야 하는 입장이 되니, 서로 유치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이러면 접속료는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킬러 콘텐츠란 미디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콘텐츠를 말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역시 “상호접속제도에서 데이터양을 기준으로 한 정산기준을 만들어내다 보니 콘텐츠제공자(CP)와 통신사(ISP) 간 또한 국내CP와 해

●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 모색’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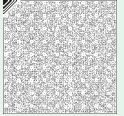
외CP간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총장은 국내 통신사의 망 이용료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설비나 비용이 기술발전에 따라 내려가는 추세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망 비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박태훈 왓차플레이 대표도 “망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술이 없어서 고해상도 영상(4K),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토론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되고 2022년 특성화고,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며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2년 차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 연구원은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운영 및 맞춤형학습관리 지원, 진로상담 내실화를 통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설계, 평가의 신뢰성 제고에 맞는 운영 여부 등에서 대부분 미흡하다”면서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안내를 위한 자료집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있어도 실제 해당과목을 들을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교학점제 2년 차 연구학교인 동북고의 이승민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개설하고 싶은 과목은 있으나 담당할 교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 교사에게 부전공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과의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강사 인력풀



●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관석·이후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월 17일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에라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난 2016년 시범 도입됐으며 2017년 8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이후 거래건수가 총 7만8천144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인 900만2천698건의 0.87%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서면계약 관행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직거래 확대·중개보수 노출 우려 △증여나 대리인 계약 등 거래방식 지원 곤란 등을 꼽았다.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프롭테크(prop tech) 업체에서 전자계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국내 프롭테크는 평가·중개·관리·금융 등을 광범위하게 앱이나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전자계약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롭테크는 빅데이터, 정보기술(IT)을 부동산 중개·임대·관리·투자 등과 결합해 만들어낸 부동산 서비스다.

한편, 조인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전자계약은 PC·태블릿·모바일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체결 가능하나 LH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PC계약만 지원해왔다”며 “모바일 계약이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계약 체결률도 높일 것으로 예상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글 서기정

국회,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의결

국회는 1월 9일 열린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97건, 규칙안 1건 등 총 20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3법’과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취업난과 주거불안정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제37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1월 13일에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 법무부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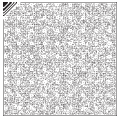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왔고, 2019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전현직을 불문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 등 주요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대통령은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대상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¹⁾을 수사한다. 이 중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처장후보추천위원회²⁾에서 위원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1) 형법상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선거방해죄, 수뢰 및 사전수뢰죄, 불법체포 및 감금죄, 제3자뇌물제공죄, 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알선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죄, 뇌물공여죄, 공용서류무효 및 공용물 파괴죄,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위변작죄, 횡령 및 배임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배임수중재죄 및 각 미수범, 변호사법위반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 국회위증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등

2) 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추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됨.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임기 3년에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이며, 퇴직 후 2년간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검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부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인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³⁾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3세이며,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사, 퇴직 후 1년간 대통령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다.

그 밖에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공수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되어 독립적인 공수처의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 대검찰청·법무부·경찰청 소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해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

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나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조항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실효된 입법 공백을 최소화했고, 시행일 이전에 DNA 채취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 법무부 소관)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그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하 수직적 지휘관계로, 이는 기관 간 상호견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사구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고 새로운 수사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했다. 대신 공소유지 및 영장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의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의 사법통제권을 마련했다. 둘째,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확립하

3)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1명,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추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됨.

기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즉,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한 후 사법경찰관에 반환해야 한다.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수사기관에 따라 상이해 발생하는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공판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상의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로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단,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은 공포 후 4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수사준칙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관계에서의 수사절차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 법무부 소관)

현행법상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보유하고, 검찰청에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두어 검사에 의한 직접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스스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기소권을 행사하는지 우려가 있었고, 이와 함께 검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 검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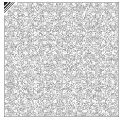
수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해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및 ‘이상의 범죄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이러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로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무위,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



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청년기본법안(정무위, 국무조정실 소관)

‘청년기본법’은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다. 이는 제20대국회 들어 발의된 총 10건의 청년 관련 제정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단일안(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의 정책참여와 관련해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던 청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의 정책참여 제고 규정을 통해 청년이 정부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으며,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 교육부 소관)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유치원3법’)이 2018년 12월 27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난 1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3법’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모든 유치원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 명령 및 재정지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장의 겸직 금지 규정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유아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규

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 국방부 소관)

이번 개정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영창은 병사를 15일 이내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의 영창처분은 영창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영창을 폐지하고 대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해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했다. 이로써 병사의 인권을 신장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종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병립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했는데,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가 큰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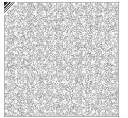
으로 나타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투표연령 하향, 비례대표 추천절차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하되 연동률을 50%로 설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의석 수(300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간 비율(253:47)은 현행과 같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0석에 한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도록 제한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권 부여 연령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며,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추천이 진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 행정안전부 소관)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있으며, 감독기능 및 보호 법령이 분산되어 있다.

‘데이터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



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하여,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데이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발전하고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체육계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종합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최대 20년간 자격의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 금지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별도

의 신설 조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에도 일부 실시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하여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법정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으며, 그 밖에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문체부 장관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및 지도자 폭력 근절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강화, 실태조사 실시, 별도의 기구 신설 등이 망라되어 있는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체육계의 선수 양성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온라인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의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따른 자에게 생계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살처분, 도태를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도모했다.

지난해 9월 17일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요구돼왔던 상황이다. 국회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가의 방역수준을 확보하고, 역학조사관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경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양수산부 소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6천 톤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해상 교통안전에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음주 운항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세분해 상향 조정했다.

또한,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중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



허 취소를 하고, 0.08% 이상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정법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각각 수소산업진흥담당기관, 수소유통담당기관, 수소안전담당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

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도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수소경제 이행시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기본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정법의 취지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해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확보, 직무능력 향상, 판로 확보, 디지털화, 혁신 촉진, 사업장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정부가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

는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및 연구·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규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제정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액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올해 163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매월 5만 원씩 추가 지급받게 됐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총 5천971억 원의 기초연금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연금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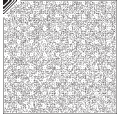
급여액 30만 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중증장애인 1만 6천 명이 매월 5만 원씩 장애인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됐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올 한 해 총 62억 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이며, 중증장애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6만 명의 농어업인들이 올해에도 매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만3천650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부터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결함 조기 파악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담고 있으며, 자동차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은 은폐·축소하거나 누락리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했다.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했고, 자동차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해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소관)

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정 해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

안은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추후 상황을 고려해 10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도시공원 유형에 방재공원을 추가하고, 도시공원 시설 중 방재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아직 설치하지 못한 도시공원의 실효 우려에 대응해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국민의 녹지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휴식터로서 도시공원의 전통적 기능에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 기능을 더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피해자가 전·입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가 있고, 소위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불법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 가족에 의하여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해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삭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마이데이터)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금융분야의 데이터는 그 특성상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 등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개정이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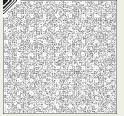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사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재식별에 사용되는 추가정보를 분리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정무위원회



둘째, 신용정보산업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개인신용조회회사(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업과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CB업을 신설하는 한편,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를 폐지하여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신용정보회사가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금융상품 자문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을 제대로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보동의 제도를 단순화·시각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 프로파일링)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설명요구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과 금융회사 등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새로이 도입했다.

논의 경과 및 기대효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적용되는 기존의 엄격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에는 대체로 공감의 이

어졌으나, 사전동의 규제 완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됐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반영됐다.

우선, 당초 개정안(김병욱 의원안)은 세금·사회보험료 성실납부 이력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요청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과세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해당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실명정보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있어 정무위원회 대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배율을 확대(3배 → 5배)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의 흐름에서 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출현으로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이 확보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정보 전문CB업, 개인사업자CB업 등 새로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도입으로 금융접근성의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바, 데이터 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재식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건강한 보건의료인력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19. 10. 24.)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해 4월 23일 제정, 10월 24일 시행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보완 과제 등을 알아본다.

보건의료인들은 2012년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환영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의무화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 추진을 목표로 현재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이다.

한편, 법시행 이전인 2018년 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개 보건의료직종 대상, 총 응답자 수 1만8천여 명)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중 의사는 50대가, 간호사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보면 요



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은 직종은 치과의사(92.0%), 한의사(88.9%), 의사(88.8%), 약사(84.4%) 순이었다. 비요양기관 근무비율은 작업치료사(43.1%), 한약사(24.1%), 물리치료사(20.7%), 간호사(16.8%) 순으로 높았다. 근무여건 중 진료환자 수를 보면 일주일간 의료인 1인당 외래환자 수는 의사 235.2명, 치과의사 98.0명, 한의사 115.5명, 간호사 153.2명으로 의원급의 외래환자 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시

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첫 회의와 위원 위촉은 올해 안에 진행된다. 또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어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바람에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또 하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도 개소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시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됐지만 심의위원회 구성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법 개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하루빨리 설립해 인력배치 등 기존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인권 문제, 처벌조항 등은 법적 과제로 남았다. 새로 출범할 제21대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건강한 보건의료인이 있어야 건강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 국민건강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심각한 인력수급난, 늘어나는 의료사고, 횡행하는 불법의료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 고영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퍼포먼스 모습

러시아의 고유한 의회 규칙



유승우 러시아 주재관

러시아 주재관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 이제는 늦은 시간 인적이 뜬 곳을 혼자 걸어 다녀도 크게 긴장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업무상 러시아 의회를 출입하면서 보게 되는 이곳 의회의 풍경은 우리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몇 가지 특이한 제도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소개해볼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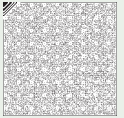
러시아에서 법률안은 3회에 걸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필요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1독회'를 위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의 '1독회'에서는 헌법 및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개정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의결을 통해 '채택(2독회 준비)',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채택 의결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수정작업(1독회에서 나온 제시안, 지적사항 반영)을 거쳐 '2독회'를 위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2독회'에서는 법률안 내용에 대한 조문별 심의 후 의결을 통해 '채택(3독회 준비)'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2독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하원 사무처 법제실의 체계·자구 검토와 상임위원회 수정을 거쳐 '3독회'에 회부된다. 마지막 '3독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법률안의 '가결' 및 '부결'이 결정되고 이후 상원 심사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제안된 모든 법률안은 하원 사무처 법제실을 통해 '현대 러시아 문학 언어와의 일치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며, 문법적, 문체적, 논리적 오류 및 전문용어 사용에 실수가 없는지 등의 '언어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무처 소속 법제실에는 언어분야 석사급 또는 동등한 자격의 전문가가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의 불참시 매회 월급의 9분의 1 삭감

러시아 의회는 2016년부터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매회 월급의 9분의 1을 삭감하고 있다. 이전에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권 위임을 통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었고, 안전과 관련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 의원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회의 불참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신설됐고, 대리투표 규정이 삭제됐다.

한편, 인형 안에 똑같은 모양의 크기가 다른 인형들이 계속 들어 있는 마트료시카라는 러시아 전통 인형이 있다. 러시아 의회에 등록된 교섭단체 중 10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는 최소 50인 이상의 정수로 '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일반 교섭단체가 가지는 권한의 대부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마치 마트료시카와 같은 구조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현재 유일하게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만 이 기준을 충족해 상호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5개의 '소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자투표 시 개인별 투표카드 소지해야

러시아 의회도 우리와 유사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방식은 상이한 부분이 많다. 전자투표 시 개인별 투표카드를 소지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투표카드 미소지자에 대한 현장 임시 투표카드 발급 등의 조치는 없으며, 전자투표 종료 후 사회자 안내에 따라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전자투표 결과에 합산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수량투표, 순위투표, 양자택일투표 등을 할 수 있다.

하원 본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만 유효하

다. 본회의 출석체크는 의원들이 직접 자신의 신분카드를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신분카드를 미소지한 의원은 의장에게 직접 출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의석에서 출석확인 발언을 해야 한다. 질의신청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버튼을 누름으로써 신청과 동시에 순번이 결정되어 전광판에 표시된다. 대신 질의시간은 일반의원은 3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원은 봄과 가을 두 번 정기회기를 개의한다. 회기 중 매달 2주는 본회의 및 고스두마 협의회(의장단, 교섭단체 대표로 구성)를 개의하도록 지정되어 있고, 매달 1주는 위원회 및 교섭단체 활동, 매달 1주는 유권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는 화, 수, 금요일에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대정부 질문에 해당하는 '정부시간'은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수요일 12시부터 14시까지로 규정하는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대부분을 명문으로 규정해 의사일정의 변동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고유한 러시아 의회 규칙을 소개해보았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연두회견을 필두로 러시아는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들어서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의회의 권한 확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러시아 의회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권력변화에 따른 의회운영방식이 어떤 변화를 거칠 것인지 관찰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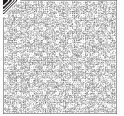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2019-11-27 행정안전위원회 가결

2019-12-10 국회본회의 가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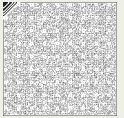
법제사법위, 추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2월 30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여 위원장은 “오전 회의가 끝난 후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란다.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제출을 요구한 위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게 국민 열망이다. 저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초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추 후보자는 저서 출판비로 신고한 1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고 이후 2곳의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기부를 한 단체에 대해 “최근에 확인했는데 한국심장병재단에 5천만 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며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1월 7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제20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자신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 출신으로서 총리의 직분을 맡게 되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각종 도덕성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논문은 2004년에 통과됐는데, 연구 윤리 기준이 강화된 것은 2007년”이라며 “제가 학자가 아닌데 학자 논문과 비교할 수 있느냐”고 했다. 19년 전 친형에게 빌린 수억 원을 총리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 초 변제한 것이 위장 증여 의혹을 부른 것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어서 갚지 못하다가 부

인이 상속 받은 오피스텔을 처분하면서 빚을 갚았다”고 해명했다.

1월 8일 청문회에서 정세균 후보자는 자신의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이에 정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화성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사진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것과 관련, 사진 촬영이 2017년 6월 1일이었고, 공사의 택지 개발 사업은 2015년 추진됐다는 점을 들면서 “2015년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외교통일위, ‘이란 상황’ 청취 및 정부대책 점검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1월 9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따른 중동 지역 전역의 한국 국민·기업·파병부대 안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재까지 이라크 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세 안정화 단계까지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인 이라크에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은 1천57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다수는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 각종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직원이다.

강경화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지방의 기업 현장에 체류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보복권에 들지 않는바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도 “급변사태에 대비, 상황 진전을 예의주시하며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대책본부 및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할 때 신속대응팀 파견 등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경화 장관은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의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인도지원, 교육 같은 분야에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병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계속 검토하고 논의해왔지만 아직 확정적인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글. 박민선



하늘을 우러러보듯 국민을 섬기는 마음

국회 의원회관 2층 한쪽 벽면에는 이창원 작가의 ‘Herdsman with Crown(목동과 왕관)’이라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9개의 거울로 별자리 목동좌와 왕관좌를 표현한 후 흰색 페인트로 얼굴 이미지를 새겨 넣은 작품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거울 속 이미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 재미를 더합니다. 국민의 얼굴이 새겨진 별자리를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듯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의원회관을 오고가면서 한번쯤 작품에 눈을 돌려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NEWS

1/7 문희상 국회의장,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7일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신임 주한 싱가포르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을 지속해왔고, 이제는 가장 선진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며 공존·번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3 문희상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아직 시작에 불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너 헤보고르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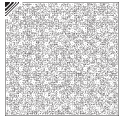
이날 옌센 대사의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



세스 관련 질문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과정을 (덴마크가)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국제사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70년이 지났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선 파견 등 (한국전쟁 때) 덴마크가 해준 많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옌센 대사는 “덴마크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에 있어 대단한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성취를 (대단한 성취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옌센 대사는 2월에 서



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예방에는 신경민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당 대표 특사단 이끌고 미 의회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월 6일부터 9일까지 자유한국당 당 대표 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다. 특히, 1월 8일에는 미국 의회를 방문해 미국 하원의원들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단장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강석호·유민봉 의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외교위 동아태소위원

회 위원장 아미 베라 의원과 간사 테드 요호 의원, 마이클 켈리·조 윌슨·마이클 버제스 의원 등과 면담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비핵화를 위한 제재 강화, 한미동맹 강화방안, 방위비 분담, 한국인 입양자 시민권지원법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하고 정책반영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겁박과 도발이 계속될 시 공포의 균형 정책상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미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한반도 전개, 북한의 서울 및 도교에 대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상에 미 핵잠수함 상시 배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미국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핵잠수함 동해 상시 배치는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인데,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순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환영”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월 20일 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여순사건 당시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킨 것에 대해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

NEWS



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라며 “진

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 이번 무죄판결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국회는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경비대 위문 방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설날을 사흘 앞둔 1월 22일, 국회 경비대를 방문해 경찰간부 및 의무경찰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국회경비대 방문은 지난해 연말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이 각출한 위문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국회 주변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시위에 대한 국회경비대의 신속한 대응과 국회를 방문한 국민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은 작은 위문금이지만, 경비대원들이 설 명절을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경비대는 1951년 창설된 이후 60여 년간 ‘국회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국회 외곽의 경비 및 방호업무 등을 담당해왔으며, 현재 경찰관 31명, 의무경찰대원 142명 등 총 175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출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월 21일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자문위원 14인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



사무처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출입기자제도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운영기로 함으로써 발족했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 언론 관련 학회, 협회·직능단체, 시민단체 추천 7인과 국회출입기자 위원 3인, 법조인 1인, 국회공무원 3인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취지 및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 정례화와 향후 운영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 1월부터 5월까지 주 1회 또는 격주, 6월 이후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개최를 검토 중이며 우선 현안으로 △출입기자 등록기준 개선 △정론관 이전 후 지적성 배정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취재질서 유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출입기자(취재) 간사단 구성·운영 검토 △국회 공보활동 방향 △출입기자 취재 편의 제고 방안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정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등 새 프로그램 선보여



국회방송이 새해부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15분에 방송되는 '달려라 입법카'는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불편에 대해 시청자의 사연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입법화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4명의 현직 변호사로 구성된 '입법어벤저스'가 특수제작차량인 '입법카'를 타고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는 예능요소가 가미돼 1월 8일 첫 방송된 이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15분에 방송되고 있는 '강연 소.공.자.'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 KBS 출신의 신영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다. 첫 회에서는 여행작가 손미나 전 KBS 아나운서가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소통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쳤다.

또한, 1월 15일부터 3일간 연속 방송된 대담프로그램

NEWS

‘신년특별기획, 대한민국 국회 국민에게 길을 묻다’는 2020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분야 등 총 3편으로 제작돼 방송됐다.

아울러, 2월 7일 첫 방송되는 ‘오유경의 인생책방’은 오유경 아나운서가 정치인을 초대해, 책을 통해 그들의 인생과 정치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책 내용을 소개하는 기존의 책 프로그램과 달리 정치인의 인생 책을 매개로 현재의 정치 흐름과 앞으로의 비전까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오유경의 인생책방’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국회 인사

배용근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서라벌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 시러큐스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1회, 홍보담당관, 재정경제위·과학기술정보위·정무위 입법조사관, 국회운영위 입법심의관,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외교통일위 전문위원, 여성가족위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강릉고, 경희대 무역학과, 경희대 행정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의사국 의안담당·의사담당, 국회운영위 입법조사관·행정실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입법조사관, 의사국 의사와장, 국회운영위 입법심의관, 기획재정부 전문위원, 의사국장

이용준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풍생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 조지아주립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2회, 재정경제위 입법조사관,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팀장, 국제국 미주과장,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입법심의관,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문위원, 법제실장



정연호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고려대 대학원 법학 박사 수료
- 농림해양수산위·행정자치위·국토해양위·기획재정부 입법조사관, 법제실 재정법제과장·건설환경법제과장,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심의관,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 전문위원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서울대 가정대학 학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석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박사(정책전공)
- 여성가족위 입법심의관, 국회도서관 자료추천위원,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전)한국여성학회 이사

홍형선 기획조정실장(1급)



- 충북대 농업경제학, 미 콜로라도주립대학 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
- 입법고시 13회, 정무위 입법조사관, 대변인실 공보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 총괄팀장,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고상근 법제실장(1급)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미 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정책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2회, 법제사법위·정무위·건설교통위 입법조사관, 행정법무담당관,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국토교통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정치행정조사실장

국회도서관, 제22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취임식 개최

제22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의 취임식이 12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도서관 전 직원이 참석한

NEWS



가운데 열린 취임식은 국민의례, 신임 관장 이력 및 경력 소개, 취임사, 직원들과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현진권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회도서관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의회도서관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도서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신용 카드 세액공제 확대연장,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주세



과세체계의 종량세 전환 등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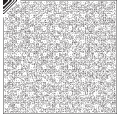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올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과정상의 쟁점을 담아 2020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별도로 추계하여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심사결과별로 정리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안·수정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밀의료발전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 ‘정밀의료발전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5일에 국회입법조사처와 김세연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유전정보기반 맞춤형 암치료 현황 및 발전과제’ 토론회에서 가칭 ‘정밀의료발전특별법’ 제정이 제안되어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



의를 위해 유전정보 기반 맞춤형 암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교수를 초빙해 임상 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지현 교수는 정밀종양학 개요, 환자 암세포 시료(specimen) 유전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 활용 절차에 대해 요약·설명했으며, 맞춤형 항암치료 관련 임상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허가 초과(off-label) 항암요법 승인의 복잡한 절차, 긴 소요시간, 승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초과 사용내역 평가 및 평가 결과 누적에 따른 페널티 등이 유전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항암 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연 의원실 신종일 비서관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과 글로벌제약기업(한국로슈)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2020년 제1회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주제로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책본부장은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원재 본부장은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AI는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해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5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문가 초청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참석대상은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세미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배를 만들지 않고 국회에서 일하는 이유



안병갑 입법조사관(서기관)
환경노동위원회

나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특이하게도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했다. 나의 전공을 알게 된 분들 중에는 이과생이 어쩌다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 공무원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공학도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공무원이 되었냐고 농반진반으로 질책하는 분들도 계신다.

너무 옛날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릴 때 나의 꿈은 나사(NASA)에 들어가 우주비행선을 만드는 것이었다.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던 나는 자연스럽게 공학을 선택했고, 비록 우주비행선(spaceship)은 아니지만 우주만큼이나 미지의 세계라는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ship)을 만드는 학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단순히 어릴 적 꿈과 선호하는 과목만 따라 선택한 전공에 불행하게도 나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재료공학이나 유체역학 같은 수업보다 공장 시간 동아리 선배들이 들려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었고 그렇게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냈다.

졸업을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아무런 적(籍)도 없게 되어서야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어쩌면 남들에 비해 많이 늦은 고민이었지만, 그래서 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현실적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학 4년을 전공과 상관없이 작게는 학내 문제에 대한 토론, 크게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며 보낸 터라, 무언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에 일조하는 것도 충분히 보람된 일이겠지만, 당시의 나에게 전공을 살리는 것의 의미는 단지 ‘조금 더 빠르고 좋은 배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는 무언가 국가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책 결정 과정 참여에 보람 느껴

3년여간의 수험생 시기를 보내고 난 후, 2008년에 국회 공무원이 된 나는 다양한 직위를 거쳐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입사했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는 수천수만의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법안, 예산안, 청원 및 민원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돼 모이는 곳이고, 그렇게 모인 아이디어들이 서로 부딪치고, 섞이고, 깎이는 과정을 거쳐 법률과 예산이라는 산출물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아이디어가 원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일부는 이를 빗대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의 입법시스템이 최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간혹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법안이 가결되기도 한다. 그중 일부는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결국 거리의 정치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20대국회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덕에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법위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우리 사회의 굼직한 현안들을 다룬 법률들이 개정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개정된 법률이 어느 쪽에도 100% 만족을 주지 못했고, 지금도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둘 하나를 더 놓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를 펼친 것 같은데, 국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정책 결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안건의 접수부터 의결 후 송부, 회의운영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입법조사관으로서 미력하지만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설명자료 하나라도, 민원전화 한 통이라도 더 내 일처럼 생각하고 살펴보고 다짐해본다. 🍵

주택문제는 왜 특효약이 없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다.

“직원이 일을 잘한다 싶으면 월급을 많이 달라 하고, 월급 많이 달라고 안 해서 좋다 싶으면 일을 잘 못해요. 아주 가끔 일도 잘하면서 월급도 적은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열이면 열, 두어 달도 못 가서 그만두더라고요.”

1. 직원이 일을 잘한다. 2. 직원 월급이 낮다. 3. 직원이 회사를 오래 다닌다. 사장님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3가지의 조건 중에 2가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충족하는 게 가능하지만 3가지 모두 충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런 것을 ‘트릴레마(trilemma, 삼중고)’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 용어는 외환시장에서 금리 조절도 자유롭게 하고 외환거래도 자유롭게 하면서 환율도 안정시키는 3가지 이상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그 중에서 2가지만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우리 일상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

유치원 대기에 숨어 있는 고민

어린이집이 1곳 있는 동네에 신도시가 생겨 사람들

이 이사를 많이 오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하나 더 필요해졌다고 가정해보자. 새로 어린이집을 지으면 시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모두 새로 지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원래 있던 어린이집에는 빈자리가 있지만 사람들은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더 넉넉하게 지으면 어떨까. 그러면 대기 기간이 짧아지는 하겠지만 그 대신 어린이가 거의 없는 유치원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들이 문을 닫게 하면 내년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길 때 대응하기 어려우니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계속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하다. 초등학교 배정하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그냥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기 기간도 없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일도 없지만 원하지 않는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유치원 입학금을 자율화해서 인기 있는 유치원은 비싼 돈을 내도록 해도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그건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임의배정에서는 운이 나쁜 사람이, 유치원 입학금 자율화는 가난한 사람이 원하는 유치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짐작했겠지만 이 역시 ‘트릴레마’다. 1. 유치원을 들어갈 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 2. 맘에 드는 유치원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3. 정부 예산이 따로 투입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

주택문제와 우리의 현실

요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1.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사람들을 없앤다. 2. 전월세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 3.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이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셋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갈등과 고민과 충돌이 시작된다.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2번이다. 누구나 밤에 잠을 잘 집은 한 채씩 필요하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면 전월세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2번을 만족시키려면 수요보다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집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집을 공급하려면 집을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든다.

이제 우리는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느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정부가 돈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면 정부가 손해를 보고도 낮은 가격에 집을 공급할 수 있으니 집값이 오를 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3번을 포기하고 1번과 2번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

이 집을 갖기를 원하는 곳의 토지는 모두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비싼 돈을 들여 땅을 사야 하고 건축비도 든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 지어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약 50만 채 정도이니 그걸 정부가 지어서 싸게 공급하려면 우리나라 예산 전체를 쏟아부어야 한다.

그렇다고 2번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수십 년간 1번을 포기해왔다. 민간인들(다주택자들)에게 여유자금에 있으면 본인이 살 집 이외에도 한두 채 또는 서너 채씩 더 구입하도록 유혹하면서 그들의 돈으로 새 집을 지은 것이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1번도 포기하지 말자거나 심지어는 1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을 하곤 한다. 1번이 아니라면 그럼 뭘 포기해야 하나. 2번을 포기하면 서민들이 길에서 자야 하고, 3번을 포기하면 나라가 망한다. 1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2번과 3번 중에 뭘 포기하는 거냐고. 3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인에게도 물어야 한다. 그럼 1번과 2번 중에 뭘 포기하는 거냐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정치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

글. 이진우(MBC 표준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농촌청년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유지항 대표
팜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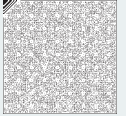
2010년 첫 배낭여행지 이집트에서 차 밑에 들어가 자는 아이들을 만났고 기아,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를 돌며 그들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했다. 결론은 시스템이었다. 먹을 것과 살 공간이 마련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아이들의 삶도 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실행해보기 위해 농사를 시작했다.

2013년 땅을 빌려 첫 농사를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나가달라’는 땅 주인의 말 한마디에 사라졌다. 이후 4번 더 땅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가 었어졌다. 이때부터 촌에서 연고 없이 새 삶을 시작하고 지속해서 이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한국 전역을 4개월 동안 돌아다녔고, 대안을 찾지 못해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 14개국 농장, 생태공동체, 농업기관, 민간단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기반 없는 청년은 농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이 물음에 실현 가능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농사, 농업, 농촌과 같이 ‘농’ 자가 들어가는 삶이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의지가 있어도 하기가 어려운 걸까?

내가 다녔던 일본과 유럽의 국가들은 촌에서 삶을 살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농지뿐만 아니라 주거, 수익모델, 기술, 인적네트워크, 유통망 모두를 민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그동안 시도할 수 없었던 것 역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

귀국 후 나는 농촌 정착을 꿈꾸는 청년 3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들에게 농지·시장 확보와 보금자리 건설을 지원하는 청년기업 ‘팜프라’를 만들었다. 팜프라는 ‘Farm+Infra’의 준말로 땅이나 집 같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팜프라에서는 청년 농부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코부기 프로젝트, 자본금 없이도 지속적인 농사가 가능한 수익모델인 쑥대밭(커뮤니티 농장), 팜프란(사육부터 판매까지 구조화된 양계 사업) 등은 물론 ‘촌 라이프’를 꿈꾸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구축과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팜프라촌에 입주한 청년들은 농사, 집 짓기, 집 고치기, 도구사용 등 여러 육체노동을 함께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무엇인지 어떤 과거와 삶의 궤적으로 살아왔는지 인지한다. 그리고 어떤 기준과 방향성으로 촌에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지는 않았다. 대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조례와 예산을 만들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게나마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역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청년에게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체계가 없다. 또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 왜 오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살고 싶어하는지, 요즘 세대의 청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대변할 수 있는 체계 역시 없다. 팜프라의 역할은 도시

와 지역, 지역민과 이주청년,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체계적인 통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팜프라촌을 거쳐 정착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기반을 제공할 것인가가 우리의 다음 과제였다. 일거리를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정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우리는 남해군과 사업파트너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첫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듣는 일이었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초계획을 만들어 경남에서 진행한 청년친화도시 시범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민관협력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왔고 그 안에는 기획부터 참여를 원했던 지자체 행정과 민간이 있었다.

참여, 기회의 평등 그리고 삶의 생태계

몇 년째 청년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여기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대상이나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청년이라는 덩어리로, 당사자들도 모르는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청년의 이야기를 면밀히 듣기보다는 추측과 지표를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정책대상과 수단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여기고 의제발굴과 정책제언, 정책실행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청년들이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회가 평등한 삶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영화를 보는 편이다. 가끔 건너뛰는 때도 있지만, 영화를 본 지 좀 됐다 싶으면 인터넷으로 볼만한 영화를 찾아본다. 새해 들어 볼만한 영화가 뭐가 있나 싶어서 인터넷에서 개봉 예정작을 주르륵 훑고 있었다. 그때 ‘라스트 선라이즈’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내용을 보니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 뒤의 일을 다루는 SF영화였다.

SF영화라면 웬만하면 챙겨 보는 습관이 있어서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태양이 갑자기 없어진 세상이라니 흥미로운 설정이 아닌가. 그런데 개봉 예정으로는 되어 있는데, 도무지 극장에서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개봉이 취소된 건지 미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영화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다.

태양의 중력에서 풀려나는 지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며,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에 의지해 살아간다. 태양은 공기와 같은 존재이며, 태양이 없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개기일식 같은 드문 현상을 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았겠는가.

태양과 관련된 재난을 그린 영화는 이미 몇 편 나와 있다. 2009년에 나온 ‘노잉’은 태양 표면의 거대한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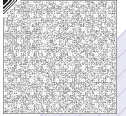
로 인류가 멸망하는 내용을 다뤘고, 2007년 작인 ‘선사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꺼져가는 태양을 되살리는 모험을 그렸다. 굳이 비교하자면 ‘라스트 선라이즈’는 ‘선사인’과 비슷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질 일은 사실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구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일단 태양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없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데 약 8분 20초가 걸리기 때문이다. 태양이 사라져도 우리는 8분 20초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른 채 8분 20초 동안은 태양빛을 쬔며 즐거워할 수 있는 셈이다.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를 붙잡아놓고 있던 태양의 중력도 사라진다. 그러면 지구는 움직이고 있던 방향 그대로 쭉 직진하게 된다. 다만 중력파의 속도도 빛의 속도와 같기 때문에 태양이 사라지고 8분 20초가 지나야 지구가 태양의 중력에서 풀려난다. 그때까지 지구는 마치 태양이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그곳 주위를 회전하게 된다.

액체 산소 비가 내린다

태양이 사라지고 지구가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기 시작해도 한동안은 목성과 토성 같은 행성을 볼 수 있다. 태양이 사라지기 전에 떠난 빛이 외행성에서 반사돼 지



구에 도착하기까지는 거리에 따라 한 시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시간이 지구의 형제 행성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태양이 사라졌으므로 당연히 지구의 모든 곳은 밤이 된다. 달도 태양빛을 반사해 빛나므로 이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별빛은 남아서 지구를 비춰주겠지만, 태양이나 달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아마도 달을 보려면 별빛을 가리고 지나가는 검은 원반을 찾아야 할 것이다.

태양이 사라지면,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식물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 온도도 천천히 떨어져 영하로 내려가면 식물은 멸종의 길을 걷는다. 지상에 사는 동물도 마찬가지다. 식물이 사라져서 산소도 더 이상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인간은 전기나 화석 연료를 이용해 빛과 열을 만들 수 있으니 이보다는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산소 생성은 멈춰도 이미 지구에 있는 산소만으로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소수의 생존자만 남아서 한정된 에너지와 식량으로 버틸 수 있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영하 100도에 가깝게 떨어져 바다가 모두 얼어붙고 아무리 난방을 해도 온기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인류도 멸망하게 된다. 시간이 더 흐르면, 지구의 대기가 액화되어 액체 산소, 액체 질소의 비가 내리다가 나중에는 대기조차도 얼어붙는다.

살길은 지하에 있다

하지만 생존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태양 에너지가 없어져도 지구에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다. 바로 지열 에너지다.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은 태양이 없어도



한참 동안 유지된다. 지하로 깊이 파고 들어가 도시를 짓고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생존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지열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도 살아남을지 모른다. 바다가 모두 얼어붙어도 심해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남을 수 있다. 두꺼운 얼음이 단열재 역할을 하고, 아래에서는 지열이 물을 데워 준다면 가능한 이야기다. 지금도 심해 열수구에 사는 미생물은 광합성이나 산소를 이용하는 대신 지하에서 뿜어나오는 황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상상은 되지만,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큰 화면에 어떻게 그렸는지 보고 싶었던 건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런 재미있는 상상의 결과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현실에서 접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

글. 고희관(과학칼럼니스트)



자주와 애민, 창 의와 열정... 첨단 디지털시대 자격루



국보 229호 자격루. 1536년. 이것들은 자격루 자체가 아니라 구성하는 물항아리와 물받이통이다.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는 자격루(自擊漏)가 등장한다. 세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영실(蔣英實)이 자격루를 작동시켜보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격루. 그 이름은 비교적 익숙하지만 실제 모습이나 작동 원리는 낯설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장영실이 만들어

자격루는 조선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과학자 장영실이 만들었다. 자격루는 일정한 속도로 물을 흘러보내 일정한 시차로 구슬과 인형을 움직인 뒤 인형이 종, 징,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 주는 첨단 자동 제어 물시계다.

자격루는 현재 국보 229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 국보 229호 자격루는 어떤 모습일까. 우선 2007년까지 사용했던 1만 원권 지폐를 떠올려보자.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크기가 큰 1만 원권이다. 앞면에 세종대왕 초상이 있고 그 옆에 자격루의 모습이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경희루의 모습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영화 ‘천문’에 나오는 자격루와 옛 1만 원권에 나오는 자격루(국보



229호 자격루)는 그 모습이 서로 다르다. 아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자격루는 1434년 장영실이 만들었다. 그 자격루는 원래 경복궁 경희루 남쪽 보루각(報漏閣)에 설치됐으나 그 후 창덕궁으로 이전되었고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사라졌다. 국보 229호 자격루(옛 1만 원권 속 자격루)는 1536년 중종 때 다시 만들어 창경궁에 설치했던 것이다.

국보 229호 자격루를 눈여겨보면, 그 모습이 좀 의아하다. 받침대 맨 위에 커다란 물항아리가 하나 있고 그 아래 작은 물항아리 두 개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커다란 물받이통(물기둥)이 두 개 서 있다. 이것이 어떻게 첨단 물시계란 말인가.

이것들은 자격루 자체가 아니라 자격루를 구성하는 일부 부품이다. 큰 물항아리는 지름 93.5cm에 높이 70cm, 작은 물항아리는 지름 46cm에 높이 40.5cm, 물받이통은 높이 196cm에 바깥지름 37cm. 국보 229호의 공식 명칭은 ‘창경궁 자격루’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창경궁 자격루 물통’ 혹은 ‘창경궁 자격루 부품’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세종실록’ 토대로 2007년 복원된 자격루

그렇다면 자격루의 온전한 모습을 어떠했을까.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원래 모습(추정)을 만날 수 있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자격루가 조선시대 당시처럼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자격루의 복원·작동에는 과학사학자인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의 열정이 큰 영향

을 미쳤다. 남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세종실록’의 기록 등을 토대로 자격루의 작동 원리를 탐구해 밝혀냈다. 이어 문화재청과 남 교수팀은 1997년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했고 2007년 복원 및 작동에 성공했다. 복원된 자격루는 크기가 가로 8m, 세로 5m, 높이 6m로 서울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작동 중이다. 전시실 하나를 꽉 채울 정도로 거대하고 육중하다.

자격루의 작동 순서와 원리는 대략 이렇다.

① 커다란 물항아리에 물을 넣고 일정한 속도로 작은 항아리를 거쳐 길쭉한 원통형 항아리로 물을 흘려보낸다. ② 원통형 항아리 속의 잣대가 위로 떠오르면서 일정 시간 마다 잣대 위에 놓여 있는 작은 구리구슬을 건드린다. ③ 이 작은 구슬은 좀 더 커다란 구리구슬을 건드려 오른쪽 시보장치 상자로 밀어낸다. ④ 커다란 구리구슬은 시보장치 위쪽의 인형을 건드리면서 이 인형이 종, 북, 징을 치도록 한다. 2시간마다 울리는 종소리는 자시(쥐), 축시(소), 인시(호랑이) 등의 12지시를 알려주고, 북소리는 밤시간인 초경, 2경 등의 5경을 알려준다. ⑤ 종을 치는 순간, 시보장치 속의 12지 동물(쥐, 소, 호랑이, 토끼 등)이 빠꾸기시계처럼 작은 구멍으로 튀어 오르도록 함으로써 몇 시(자시 오후 11시, 축시 오전 1시, 인시 오전 3시 등)인지 알려준다.

놀라운 제어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정리해보자. 자격루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열두 번 종을 쳐서 시각을 알린다. 두 시간마다 종소리만 한 번씩 울리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 중인 복원된 자격루. 2007년 복원해 현재 실제로 작동되면서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면 그것이 자시인지 축시인지 인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니 자시, 축시, 인시에 해당하는 인형이 시보장치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고안했다. 그리고 밤(초경에서 오경)에는 종소리와 별도로 북과 징을 쳐서 시각을 알려준다. 초경에는 북소리 한 차례, 이경에는 북소리 두 차례가 울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소리를 구분한 이유는 낮과 밤 시간을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릴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세종실록’에는 “숨었다가 때를 맞춰 번갈아 올라오는 인형들…조금도 틀림이 없으니…귀신이 하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단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듯하면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 그중에서도 물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세팅하는 것과 이를 통해 인형을 정확하게 쳐 올리도록 하는 제어시스템이 핵심 관건이다. 장영실은 이러한 자동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국보 229호 자격루, 그러니까 옛 1만 원권 속의 자격루는 2018년까지 덕수궁 경내에 있었다. 일제는 덕수궁에 석조전 서관을 짓고 이왕가미술관을 개관하면서 1938년 광명문을 덕수궁 남서쪽 구석으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창경궁에 있던 자격루를 옮겨와 광명문 밑에 전시하기 시작했다. 덕수궁 공원화 계획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덕수궁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2019년 3월 1일 광명문은 원래 위치였던 함녕전 앞으로 옮겨 복원됐다.

자격루의 작동 원리는 우리 스스로를 놀라게 한다.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을 정도로 탁월하다. 세종의 자주성과 애민 정신, 장영실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일제에 의한 수난사까지. 기억해야 할 과학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국보 229호 자격루는 현재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 중이다. 보존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자격루를 어디로 옮겨놓을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래 위치였던 창경궁이나 장영실 자격루가 처음 설치됐던 경복궁 경회루 옆도 좋을 듯하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삶이 힘든가요
많이 지쳤나요

080-788-0479

국회생명사다리

24시간 전화상담센터



지금 전화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해 주세요

힘이 되어 드릴게요



장미산성 동북쪽 성벽에서 본 풍경. 남한강이 굽이쳐 흐른다.

고구려의 성을 걸으며 굽이쳐 흐르는 유장한 물줄기, 남한강을 굽어보다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장미산성 성곽길



충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축장이었다. 백제의 땅이었다가 고구려의 영토가 된 뒤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이곳을 손에 넣게 된다. 그중 고구려의 땅이었던 70년 세월,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장미산성을 찾아갔다. 고구려의 성, 장미산성을 한 바퀴 돌며 산전을 굽어본다. 넘실거리는 산줄기들과 유장하게 흐르는 남한강이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름도 예쁜 장미산성

영토와 사람을 지키는 보루이자 침략의 전초기지, 창칼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전장, 그 한가운데 자리한 성 이름이 ‘장미’다. 성이 있는 산 이름도 ‘장미’다. 장미(薔薇)라고도 쓰고 장미(長尾)라고도 쓴다. 첫 번째 장미는 우리가 흔히 보는 꽃, 바로 그 장미다. 두 번째는 ‘긴 꼬리’라는 뜻이다.

첫 번째 ‘장미’는 장미산에 남아 있는 장미와 보련이 남매의 슬픈 전설에서 딴 이름이다. 두 번째 ‘장미’는 산의 형국이 긴 꼬리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다.

뜻은 다르지만 ‘장미’라는 예쁜 이름이 전장의 한가운데 놓인 성 이름이라는 것이 낯설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던 충주를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는 백제였다. 다음은 고구려였다. 광개토대왕(재위 391~413년)은 한강 유역까지 진출했고, 그의 아들인 장수왕(재위 413~491년) 때 남진정책이 완성된다. 신라는 진흥왕 9년(548년)부

터 진흥왕 12년(551년)까지 죽령 이북 10개 군을 차지했는데, 그때 충주가 신라 땅이 됐다.

충주를 차지한 고구려는 장미산성을 국경의 요새로 만들었다. 장미산성은 신라 진흥왕이 충주를 차지할 때까지 70년간 고구려의 성이었다.

성의 규모는 높은 곳이 5m, 너비는 5~10m, 둘레는 3km 정도다. 동북쪽 성벽에 나무 기둥을 여러 개 박아 만든 치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산성은 장미산 정상과 계곡 등 정상부 둘레를 에워싸고 있었다. 지금은 그 성벽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장미산성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 충주시내에서 장미산성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드물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산성에서 2km 남짓 떨어진 마을 어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자가용이 없으면 택시를 타는 편이 낫다.

장미산 기슭에 있는 이른바 ‘장미산마을’로 접어들었다. 잔설이 얼음이 됐는지 도로가 미끄럽다. 승용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를 따라가던 차를 멈췄다. 오르막길이 심해지



장미산 정상 표석



는 곳이다. 길에 얼음이 남아 있어 차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곳부터 걷기 시작했다.

성벽 위에서 바라본 남한강

비탈길 빙판을 피해 조심스레 걷는다. 걸어 내려 오시는 스님 두 분을 만났다.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 하라는 인사와 함께 합장을 하신다. “스님도 천천히 내려가세요”라고 웃는 얼굴로 화답했다. 아무도 없는 한겨울 산중 빙판길 위의 인사가 따뜻하다.

양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산골짜기에 가득하다. 치열했던 녹음과 화려했던 단풍을 다 버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소쇄하다. 숨쉴 때마다 찬 바람이 폐를 찌르는 것 같다. 산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봉학사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 올라오는 길에 보았던 스님이 계신 곳이었다. 암자를 뒤로 하고 성곽 위에 난 길을 걷는다. 굽이도는 성곽길과 길 한쪽에 우뚝 솟은 커다란 소나무가 보인다. 한파의 기운, 칼바람 불어대는 겨울일수록 소나무의 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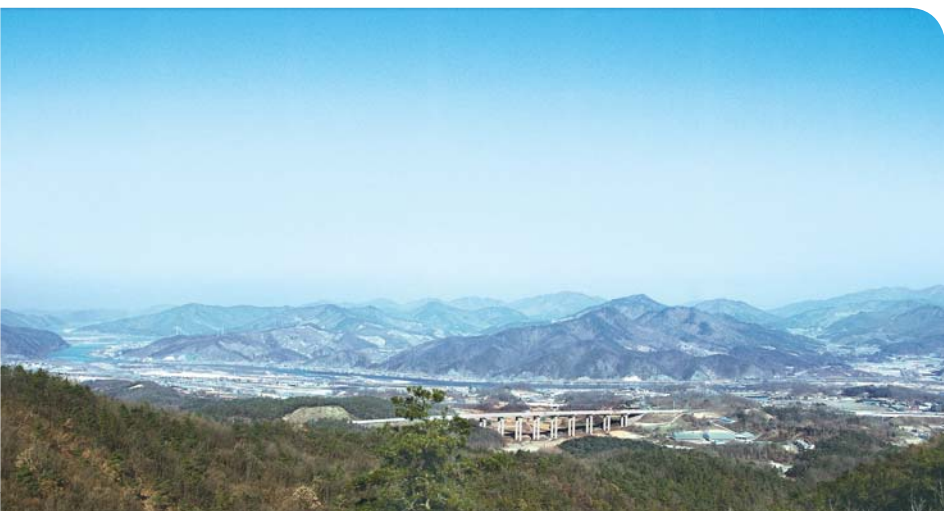
르른 기상은 더 빛난다.

그 아래 의자가 놓였다. 시야가 트이는 곳이다. 산성의 동북쪽에 있는 전망 좋은 곳이다. 가슴 통쾌한 전망이다. 겨울바람이 머리카락을 형클어뜨린다. 살을 에는 바람이 오히려 상쾌하다.

굽이치는 남한강 물결이 유장하다. 사람 사는 마을의 이야기를 품고 그렇게 흘러간다. 남한강 건너 소태면 일대와 강 서쪽 양성면이 한눈에 들어온다. 골격 드러난 겨울산은 힘줄 불거진 장수의 팔뚝 같다. 산의 품에 안긴 마을도 푸근해 보인다.

길은 숲으로 이어진다. 그리 오래지 않아 헬기장이 나왔다. 시야가 트이는 곳이다. 남한강 물결마다 햇별이 반짝인다. 그 물가에 탑이 하나 있다. 국보 6호 충주탑평리칠층석탑이다. 그 탑이 있는 공원이 손톱만 하게 보인다.

헬기장 다음에 도착한 곳은 장미산 정상이다. 정상도 전망 좋은 곳이다. 겹겹이 쌓인 산 능선이 밀려오는 물결 같다. 정상에서 흘러내린 산자락 끝에 작



장미산성 동북쪽 성벽 위에서 본 풍경.
산줄기와 남한강이 잘 어울린다.



장미산 정상, 장미산성 서북쪽 성벽 부근에 있는 나무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은 봉우리가 솟았다. 그 위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 보인다. 노은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충주고구려비를 보다

정상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뒤로하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산을 둘러싼 성곽 뒤로 남한강 물줄기가 보인다. 강을 위호하는 산줄기의 힘찬 기운은 겨울이라서 더 도드라진다. 이곳까지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은 모양이다. 낙엽이 쌓인 좁은 산길을 조심조심 걸어 내려왔다. 그렇게 다시 봉학사로 돌아왔다.

암자 앞 나뭇가지에 매달아놓은 플라스틱 소쿠리에 곡식 한 줍이 놓여 있었다. 그 위로 햇별이 따뜻하게 고인다. 먹을 것 없는 겨울, 새들의 양식이다. 햇별 고이는 곳은 칼바람 한파에도 온기가 서린다.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간다. 고구려의 성, 장미산성 성곽길 걷기의 마무리는 충주고구려비를 보는 것으로 끝내야 할 것 같았다. 차를 달려 충주고구려비가 있는 충주고구려비전시관에 도착했다.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은 장미산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장미산 남쪽 마을 이름이 선돌마을이다. 마을에

돌이 서 있어서 선돌마을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마을에 사는 전의 이씨가 공을 세워 임금이 그에게 땅을 하사했는데, 땅의 경계를 선돌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이 고구려비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1979년에 그 돌이 고구려비라는 걸 알게 됐다. 선돌이 고구려비라는 것과 고구려의 전성기인 5세기 말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충주고구려비는 고구려가 충주까지 영토를 넓혔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고구려비다. 국보 제205호로 지정됐다.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입구로 들어가서 통로를 따라가면 당대 동북아시아 최정예 기마부대인 개마무사 조형물이 여행자를 반긴다. ‘개마’란 갑옷을 입힌 말을 의미한다. 개마무사는 적진을 돌파하는 돌격대였으며 용맹의 상징이었다. 광개토대왕 때 개마무사가 5만 명 정도 됐다고 한다.

개마무사 조형물을 지나 전시실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넓은 전시 공간이 나온다. 그 가운데 고구려의 기상이 깃든 충주고구려비가 우뚝 서 있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소리대로 적기와 어법대로 적기



우리말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장 제1항에도 나와 있듯이 원칙적으로 소리대로 적기도 하고 어법대로 적기도 한다. 본디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소리대로 적어야 하지만, 말뜻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법대로 적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말은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놀이’의 본뜻에서 멀어지지 않은 ‘놀음’은 어법대로 적지만, ‘놀이’의 본뜻에서 멀어진 ‘노름’은 소리대로 적는 식이다.

그렇다면 ‘낫으막하다’라는 말은 바르게 적은 걸까? ‘위치와 소리가 꽤 낫다’라는 말뜻을 생각하면 본뜻에서 멀어진 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르게 적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우리말에 ‘-으막하다’라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기에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나지막하다’처럼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야트막하다’와 ‘자그마하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각기 소리대로 적는다.

야트막하다 여트막하다	나지막하다 높지막하다 느지막하다 큼지막하다	기다마하다 자그마하다 조그마하다
----------------	----------------------------------	-------------------------

그런데 소리대로 적기로 하자면 왜 ‘나즈막하다’처럼 적지 않는 걸까? 혹자는 ‘나지막하다’가 ‘나즈막하다’의 구개음화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혹자는 ‘나지막하다’가 ‘나직하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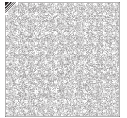
그런데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따라 ‘나직하다’와 ‘나즈막하다’를 버리고 ‘나직하다’와 ‘나지막하다’를 표준어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말의 뜻을 강조하는 ‘○○막하다’ 또는 ‘○○마하다’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겹받침의 표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넙다’의 경우 본뜻에서 멀어진 말은 ‘넙죽’처럼 소리대로 적으면 그만이지만 본뜻에서 멀어지지 않은 말은 겹받침 중 ‘넙적하다[넙쩌카다]’처럼 ‘ㅂ’이 소리 나면 어법대로 적고, ‘넙따랗다[넙따라타]’처럼 ‘ㄷ’이 소리 나면 소리대로 적으면 된다.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에는 ‘넙둥글다’처럼 어법대로 적는다.

넙적하다 넙적다리 넙죽하다 넙죽넙죽	넙따랗다 넙찍하다	넙-둥글다
------------------------------	--------------	-------

다만 ‘넙데데하다[넙페데하다]’처럼 ‘ㅂ’이 소리 나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어법대로 ‘넙데데하다’로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소리대로 적는 말도 있어서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즉, 어법대로 적어야 하지만 소리대로 적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

글. 김형주(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사무국장)



국회, 본회의 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민생법안 등 의결

2020. 1. 1. ~ 1. 31.

- 1 • 문재인 대통령, 시민들과 함께 아차산 등반하며 새해 첫 날 맞아
- 2 •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 국내 정계 복귀 선언
• 여상규·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 3 • 새로운보수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탈당
• 박영선·김현미·유은혜 장관 총선 불출마 선언
- 5 • 전국 16개 외국어고 “외고 폐지는 위헌”, 정부에 의견서 제출
- 6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7 •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선거법 개정·공수처 설치 법 공포안 의결
•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취임 후 첫 만남
- 8 • 이란, 미국에 보복공격 개시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 180명 태운 우크라이나 여객기 테헤란 부근서 추락…탑승자 전원 사망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한국 통해 생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메시지 전달
- 9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워싱턴서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참여하는 ‘통합추진위’ 구성키로…위원장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
• 국회,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198건 상정·처리
- 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 국회, 본회의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처리
- 14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개최
• 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 15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회담
•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찾아 여야 지도부 예방
•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예비타당성 통과…이르면 2023년 착공
- 16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
•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19 •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 정종섭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한국당 TK의원 중 처음
- 20 • 국내서 ‘신종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중국인 여성
- 21 •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양당협의체’ 출범
•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하는 검찰 직제개편 확정
- 22 • 현재, ‘15억원 초과 집 대출 금지’ 위헌소송 심리 착수
• 육군, ‘여군 희망’ 성전환 육군 하사 전역 결정
- 25 • 외교부, 중국 우한시 여행경보 ‘철수권고’로 상향조정
- 27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 문재인 대통령,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추진” 지시
- 28 • 국제유가, 신종코로나 공포에 급락…금값은 6년 만에 최고
• 세계보건기구(WHO), 신종코로나 글로벌 위험 수준 ‘보통→높음’으로 수정
• 외교부, “중 우한에 전세기 4편 투입해 우한 체류 한국인 귀국 지원”
- 29 • 안철수 전 의원, 바른미래당 탈당
- 30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정리. 김현아

정치의 품격

절기가 소한, 대한을 지나며 겨울 위세가 꺾였습니다. 설 연휴까지 지나고 봄색깔이 완연해지면서 국회 경내의 숲이나 서울, 수도권 숲에는 참새, 직박구리, 까치 등 새들의 지저귀이 한층 청량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게 정치권에는 각 정치인, 정치 세력들이 4·15총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이 뜨겁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엿그제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해 새 다짐을 한 분들이 많을 텐데 혹여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돌아보면 다 소중한 날입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인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경구로 위안을 삼으면 좋겠지요.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의 의미도 큰 1월은 결혼식 등 행사가 많은 달이었습니다. 특히 총선거 때문에 올해 1월은 개최 마감 시한을 앞뒀던 출판기념회 등 정치행사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월 11일 토요일은 유난스럽게 일정이 집중됐습니다. 지인 자녀 결혼식과 출판기념회, 동창회가 열 건에 가까웠습니다.

기준을 정해 참석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최소로 압축했죠. 청첩장 등을 통한 당사자의 직접 초청에만 응했습니다. 전화나 문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 메시지, 특히 단체방 초청에는 응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조직 간 소통수단 가운데 대면소통이 효율적이라는 상식에 기초한 선택이었지요.

결정은 합리적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점심·저녁 식사를 겸한 결혼식장에서는 절제된 품격을 봤습니다. 모두 중규모 결혼식이었는데, 여러 가지 절제된 모습을 봐 펍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비해서는 하객이 비교적 많지 않고 수수하기까지 해 하객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날 경험을 통해 거친 한국 정치에도 절제된 품격이 발휘되길 바랐던 것은 비약이 아니겠지요. 물론 우리의 정치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등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각 정치 세력들이 자기 주장을 억제하는 품격을 보여주며 질적인 도약을 이뤄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21대 새 국회도 품격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총선거나 미국의 대통령선거 등 지구촌 곳곳에서 선거가 있는 정치의 해입니다. 국제 정치·경제세력 재편에 따른 마찰음이 계속되며 예측하기 힘든 변화도 있겠죠. 국회보는 국내외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소화해 제작하겠습니다. 독자의 귀한 지적은 소중하게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



이춘규
홍보기획관·편집인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